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28.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 1층(○○동)에서 ‘○○마트(422.73㎡)’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8. 17. 15:30경 냉장보관 식품(찰꼬마떡볶이 1kg×8개, 함흥비빔냉면 430g×7개)을 냉장보관하지 않은 행위로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 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9.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8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납품업체에서 적발된 제품을 냉장 보관하라고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냉장고 앞에 진열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미숙 등의 사소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③ 납품업체에서 찰꼬마떡볶이를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제공한 것으로 마진이 거의 없는 점, ④ 해당제품은 에어커튼이 부착된 냉장고 앞에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기로 인해 10℃에서 보관되고 있었던 점, ⑤ 특히 적발된 제품 중 찰

꼬마떡볶이는 청구인이 적발당일 반품하기 위해 빼놓은 것인 점 ⑥ 청구인은 허리디스크 치료 중인 모친의 병원비, 업소 및 거주지에 대한 월세,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찰꼬마떡볶이 8개, 함흥비빔면 7개의 냉장보관 식품 다수를 판매목적으로 상온 보관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위반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유효성은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 1층(○○동)에서 ‘○○마트(422.73㎡)’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6. 8. 17. 15:30경 냉장보관 식품(찰꼬마떡볶이 1kg×8개, 함흥비빔냉면 430g×7개)을 냉장보관하지 않은 행위로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 게 적발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16. 8.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9. 7. 청구인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840,0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에서 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0 ~ 10℃를 말하고 ‘냉장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고 또는 냉장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4항라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냉장보관식품을 냉장보관하지 않았으므로 냉장식품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납품업체에서 적발된 제품을 냉장 보관하라고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냉장고 앞에 진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적발된 식품이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로 인해 10℃에서 보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발된 식품이 진열된 장소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고와는 달리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적발당일 찰꼬마떡볶이를 반품하기 위해 빼놓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행위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식품판매업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냉장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